

聯蘇 社會主義 理論과 페레스트로이카

全 洪 燦*

<目次>	
I. 共產主義 實現의 約束과 蘇聯社會主義의 進展	5. Brezhnev의 「발전된 사회 주의」論
1. Marx의 「초기공산체제」	6. 페레스트로이카의 출현
2. Lenin의 「社會主義체제」	II. 페레스트로이카와 새로운 사 회주의 개념
3. Stalin과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출범	III.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
4. Khrushchev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격적건설 단계」	IV. 페레스트로이카와 평등주의 원칙의 변화
論	V. 종합: 새로운 모델

본 小考는 체제개혁운동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지금까지 소련체제를 지
배해 온 사회주의 이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체제개혁의 내용이 기존의 Marxism-
Leninism적 사회주의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만일 혁명적인
변화라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 혁명성이 지적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
이 본 논문의 주 목적이다.

Marxism-Leninism을 지도이념으로 표방한 볼셰비키 혁명의 궁극적 목표
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혁명후 지난 73년
간 소련공산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黨綱領(programma KPCC)을 재작성하
면서 소련의 사회주의적 성취업적, 현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실천과제를 제
시하곤 하였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공산주의를 성취하겠다
는 일종의 청사진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 실현의 희망
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 약속을 재천명하는 소련공산당의 부단한 의지표
명이었다. 黨綱領의 작성에서 黨의 이론가들이 특히 고심하고 역점을 둔 부

*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분은 소련의 현위치에 관한 규정이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 후 사회주의적 발전途上에서 소련사회가 공산주의에 얼마나 근접한 상태에 있는가, 실제로 근접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解明은 공산당 통치권위의 정당성과 적절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어떠한 장기적인 구상으로 공산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는가?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의 발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73년간 소련이 공산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스스로의 좌표를 어떻게 이해하였던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 내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그 실천과정에서 어떠한 현실인식의 수정들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찰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혁명운동의 발생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의미를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한 소련 사회주의의 발전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I. 共產主義 實現의 約束과 蘇聯 社會主義의 進展

1. Marx의 「초기공산체제」

Marx는 사적유물론에 입각하여, 왜 자본주의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불가피한가에 관하여는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였지만, 그러한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들을 청산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타綱領批評(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1875)에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간략하게나마, 프롤레타리아 혁명 후 나타날 체제를 「초기 공산체제」(the first or lower phase of communist society)와 「후기 공산체제」(the higher stage of communist society)로 나누고 그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즉, 「후기 공산체제」라는 완전한 공산주의체제를 달성하기 이전에 「초기 공산체제」라는 과도기적 중간단계를 거치게 될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공산주의체제가 성취되기 이전에, ‘노동에 비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중간체제(Marx의 용어로는 「초기 공산체제」)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혁명적 전환기로서 「초기 공산체제」에서는 경제구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화

적,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잔재가 사회 저변에 남아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어느정도의 물질적 자극(incentive)은 효과적인 생산의 증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과도기에서는 개인이 투입한 노동에 비례한 반대급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자본주의 잔재의 완전한 소멸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공산주의의 실현은 혁명 후 일정기간의 과도기(즉, 「초기 공산체제」)를 거친 후에 가능하며, 그러한 과도기를 Marx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간으로 규정하였다 (Marx, 1978:525-541).

2. Lenin의 「社會主義체제」

이렇듯 Marx가 다소 막연하게 상정했던 과도기적 상황을 혁명가 Lenin은 보다 구체화시켰다. Lenin은 러시아 혁명전에 저술한 「國家와 革命(The State and Revolution)」이란 소책자에서 Marx가 제시한 과도기적 성격의 「초기 공산체제」를 「사회주의체제」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Marx가 양자간의 차이를 막연히 ‘노동에 따른 배분’과 ‘필요에 따른 배분’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했던 것에 비해, Lenin은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였다. Lenin은 사회주의를 계급적 차이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과도기 체제로 규정하고, 그러한 과도기적 체제는, ‘노동에 비례한 공정한 배분을’ 관장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국가체제로 특징지워 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사회주의가, 계급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고 국가도 소멸되는 상태인 공산주의와 가장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측면이다. 따라서 Lenin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dictatorship)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과거 부르조아국가와 마찬가지로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나, 그러한 권력의 행사가 다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며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라는 과도기는 상당히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하였다 (Lenin, 1976:101-124).

3. Stalin과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출범

Lenin의 예측대로, 볼셰비키 혁명 후 지난 73년간의 소련역사는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 공고화를 위한 시 행착오와 투쟁의 역사였다. 비록 혁명 직후 소련의 국호를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으로 정하였으나, Lenin 자신은 1924년 사망시까지 소련의 위치를 아직 사회주의 단계에도 못 미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전되는 과도기로 보았다. 그것은 사회주의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제도화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련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제도화를 이루고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했음이 정식으로 선포된 것은 1936년 Stalin에 의하여서였다. 그는 제1, 2차 5개년 계획의 성과로 소련은 바야흐로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 및 사회구조를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1936년 11월에 강조하였다.⁽¹⁾ 이에 따라 1936년 「Stalin 헌법」은 소련이 비로소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선포하는 상징적 문서가 되었다.

Stalin에 의하면 이제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선 소련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풍요한 물자생산이 전제되어 있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체제는 그에 필요한 산업생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여야 하고, 따라서 기계설비등 생산재의 증산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Stalin은 전체적인 산업생산 규모의 확대를 위한 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정책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완전한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생산수단의 완전한 국유화

(1) 1936년에 제정된 Stalin 헌법에는 Stalin이 수립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만 규정되었고, 그 다음 어떻게 공산주의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黨綱領의 제정으로 제시될 예정이었다. "O proekte Konstitutsii Sovyza SSR,"(소련 연방공화국 헌법 초안에 관하여) in I.V. Stalin, *Sochineniya*, vol. 14-16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1967), vol. 14, pp.149-50. Alfred B. Evans, "Developed Socialism and the New Programme of the CPSU," in Stephen White and Alex Pravda, eds., *Ideology and Soviet Politics* (London: Macmillan, 1988), p.85에서 再引用.

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talin은 여전히 비국유화 상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농업부분의 집단농장을 지적하였다. 국유재산이 아닌 농민집단의 공동재산의 형태를 떠고 자치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농장은 점진적으로 국영농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적 구분의 완전한 소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물자의 배분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시장형태를 띤 ‘流通’성 구조를 소멸시키고, 보다 공산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완전한 중앙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적절적인 분배와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데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계획경제의 완성을 위하여서도 집단농장의 국유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세째로, 교육의 확산을 통한 인민들의 문화수준의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확대, 그리고 노동임금의 향상 등이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주의체제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소련인민들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그 자체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 첫번째 조건으로 제시된, 생산재의 증산 그리고 자본축적에 앞설 수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Stalin, 1967:268-271; Evan, 1988:86-87에서 제인용).

이 세가지 조건들은 그 후 소련지도자들에 의하여 소련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당면과제로 받아들여졌다. 그 가운데 후일 소련지도자들이 특히 중점을 둔 측면은 물질적 생산기반의 충분한 확대였다. 공산주의가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풍요한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성취함으로써 소련은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Stalin의 지적은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탈성을 위한 최초의 권위있는 청사진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러한 청사진을 가진 이상 그 실현 가능성도, 비록 시간은 걸릴지라도, 상당히 낙관적인 것으로 비추어졌다.

4. Khrushchev의 「공산주의사회의 본격적 건설단계」論

Khrushchev는 사회주의의 완성과 공산주의의 탈성에 관하여 어느 소련지

도자 보다도 낙관적인 희망을 제시하였다. 1956년의 제20차 소련공산당 전당 대회에서 그는 소련이 일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지를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소련은 이미 공산주의의 실현도 목전에 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이룩한 상태라고 호언하였다(Khrushchev, 1957:55-61; Evans, 1988:91에서 재인용). 그 후 3년인 지난 1959년의 제21차 전당대회에서 그는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의 본격적 건설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선포하여, 소련사회가 Stalin이 앞서 지적하였던 세가지 조건들을 이미 달성하여, 사회주의를 뒤로 하고 공산주의로 사실상 진입한 것으로 낙관적인 현실진단을 제시하였다. Khrushchev의 그러한 현실진단은 1961년 제22차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공식화되어 당시 채택된 새로운黨綱領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그黨綱領에 의하면 소련은 1970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며, 1971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의 조성이 완성되고, 그리하여 1980년까지는 소련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의 실현이 이루어 져서, 현 세대의 소련 국민들은 공산주의체제 아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Khrushchev, 1962:33; Evans, 1988:92에서 재인용). 전체적으로 볼 때, 1961년의黨綱領은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발전을 지극히 순조롭게 조망하였고, 따라서 공산주의의 조기실현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다.

5. Brezhnev의 「발전된 사회주의」論

그러나 Khrushchev가 실각하고 Brezhnev 체제가 들어선 후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차츰 그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 소련 사회주의의 현주소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임박성을 암시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본격적 건설단계」論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에 개최된 제24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Brezhnev는 국민들의 희생적인 노동으로 소련은 「발전된 사회주의」를 달성하였다고 선포하였으며(Brezhnev, 1970~82:134-135; Evans, 1988:95에서 재인용), 1977년에 제정된 새로운 소련헌법에서 이는 다시 공식화되었다(Sharlet, 1978:75). 「공산주의 사회의 본격적 건설단계」를 폐기하고 대신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Brezhnev 정부는 실질적

으로 소련사회가 아직 Khrushchev가 호언하였듯이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Brezhnev 정부가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사실상 상당히 후퇴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발전된 사회주의」論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본격적 건설단계」論의 경우에 비하여 공산주의의 실현에 소요되는 사회주의적 과도기를 보다 장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발전된 사회주의」論의 요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 당시 당의 대표적 이론가 Anatolii Butenko의 지적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Butenko는 주장하기를, 사회주의는 단순히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발전적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과도기체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충분히 성숙되어야 할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현실적인 과제는 조급하게 공산주의적인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제도의 정착과 그것의 공고화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모든 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되고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기반이 완전히 갖추진 이후에야 가능한 완전히 별개의 단계라고 하였다(Butenko, 1976:31-41; Evans, 1988:96-99에서 재인용). 결국 「발전된 사회주의」論의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Butenko가 주장한 것은,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Khrushchev가 호언한 것과는 달리, 아직 요원한 미래의 꿈이고, 현 단계에서 소련은 사회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는 1977년 10월 새로운 헌법제정에 관한 Brezhnev의 언급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Brezhnev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자체가 몇 단계를 거쳐야 할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될 하나의 별개의 사회체제라고 표현하였다(Evans, 1988:98).

소련사회의 현주소에 관한 Brezhnev의 수정에 따라 소련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실현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청사진의 제시를 위한 黨綱領 개정작업은 수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결국 Brezhnev 집권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새로운 黨綱領은 Brezhnev 사망 후 몇년이 지나서 1986년에 개최된 제27차 전당대회에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기간 동안, 특히 Brezhnev 사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의 지도자들과 당의 이론가들은 소련 사회의 현위치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그만큼 소련사회가 사회

주의의 이상과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된 사회주의」라는 개념 조차 소련 사회의 현실을 규정하는데 부적절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소련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재인식을 강조하였다. Andropov와 Chernenko도 그러했었고, Gorbachev 역시 이미 집권 이전부터 소련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산주의 실현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6. 페레스트로이카의 출현

Gorbachev 집권 이후의 당이론가들은 「발전된 사회주의」라는 개념 조차 소련 사회주의의 현위치를 규정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게 되었다. 가장 분명한 비판은 Gorbachev 자신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는 과거에 「발전된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소련 사회가 내포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채, 소수의 부분적 업적만 선택적으로 부각시켜 소련의 사회주의를 과대평가한 오류를 범했다고 하여 그것이 적절치 못한 현실진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Pravda*, 1986. 2. 26). 그리고 1986년에 채택된 새로운 黨綱領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 개념의 공식적인 폐기선언은 없었으나, 전체를 통하여 그 용어는 단지 한번 나타날 뿐, 더 이상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논의는 없었다. 오히려 소련은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내용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論이 소련의 현주소에 대한 적절치 못한 규정임을 암시하였다. 그 대신 1986년의 黨綱領에서는 소련 사회에 있어서 미래의 번영과 안정은 사회 경제적인 발전의 가속화(uskorenie: acceleration)를 통하여, 특히 선진 서방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경제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여러방면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Pravda*, 1986. 3. 7.).

「발전된 사회주의」論을 否定한 1986년의 黨綱領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Gorbachev의 개혁정책(perestroika)은 기존의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상당한 개편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Brezhnev의 「발전된 사회주의」論이 Khrushchev가 60년대의 소련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의 본격적인 건설단계」라고 규정했던 낙관적 진단을 이미 일차 후퇴시켰던 것을 Gorbachev의 페레스트로이카

는 이를 또 다시 한 단계 더 후퇴시킨 것을 의미한다. 즉, 20~30년 전에 Khrushchev가 예견하였던 것 보다 소련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서 한 단계 씩 더 멀어져 감을 뜻하였다. 또한 이는 그간 소련이 성취한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야기하였다. 그것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의미하는 제도 개편의 내용 뿐만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를 주도하는 Gorbachev와 그의 정책을 입안하는 지식인들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의미석을 제시한데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그것은 지금까지 소련에서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Marxism-Leninism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의 일부로서 이해되었던 것에서 탈피한 혁명적인 전환이다.

Ⅱ. 페레스트로이카와 새로운 사회주의 개념

지금까지 본 바와같이 소련에서 사회주의란 개념은 Lenin 아래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에 앞서 거치게 되어 있는 중간단계적 사회체제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한 중간단계적 사회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자본가의 소멸로 계급적 적대감이 청산된 상태이고, 다만 국영화에서 제외된 집단농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노동자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급적 구분 자체는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이며 계급적 착취의 원천이 된다고 한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는 모두 청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적 정리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성취과제는 공업과 농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생산기반을 충분히 확대함으로써 풍족한 물자생산이 전제되어 있는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소련에서 Marxism-Leninism의 맥락에서 이해된 사회주의 개념의 대체적인 내용이었다.

혁명 아래 소련공산당은, 한편으로는 국내정치적인 목적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초기에 실제로 이룩한 팔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실현에 관하여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곤 하였다. 그러한 낙관론이 가장 뚜렷히 부각된 것은 Khrushchev 집권기였다. 그러나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소련경제가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점차 수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Khrush-

chev가 1960년대의 소련을 「공산주의 사회의 본격적인 건설단계」로 규정하였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Brezhnev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주의」論으로 후퇴 수정되었던 바가 있었다. 이어서 80년대 중반에 출범한 Gorbachev지도체제는, 70년대 후반기 부터 점차 가시화된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와 과학 기술의 침체로 인하여 「발전된 사회주의」論도 소련 사회주의의 현단계를 규정하는데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가치와 함께 소련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떠한 새로운 사회주의 개념하에 소련의 사회주의를 재구성하려고 하는가? Gorbachev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주도하는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소련에서 실천된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를 “兵營사회주의(barracks socialism)” 혹은 “관료사회주의(bureaucratic socialism)”으로 특징지웠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의 공유화(public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라는 구조적 특성에 집착하여 인식한 오류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았다. 경제학자이며 현재 부총리인 Leonid Abalkin에 의하면 사회주의의 핵심은 그러한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 대신 어떠한 사회체제가 사회주의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으로서 그는 다음의 두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의 기준으로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상위의 사회발전단계라면 자본주의 사회보다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 혁신성 등에 있어서 앞서야 한다. 둘째, 사회적인 기준으로서, 사회주의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준의 사회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Financial Times*, 1988. 12. 13). 이 두가지 기준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Abalkin에 의하면, 진정한 사회주의 정신이 구현된 사회란 기본적으로 국민(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의 질적인 우위에서 특징지워지는 것이지 생산관계의 특수한 양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사회주의 정신의 요체로 보고 그것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제가 가장 사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력과 생산양식간의 상호관계로 역사발전을 설명하고, 공산주의의 실현에 필요 한 정치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도기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balkin외의 다른 페레스트로이카 지식인들도 “병영사회주의” 혹은 “관료

사회주의”의 원인을 Marxist-Leninist 전통의 사회주의 개념에서 사회주의를 재산의 국유화와 동일시한 결과 그것을 관장하는 국가와 당의 관료체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데에서 찾았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모든 재산의 소유주가 됨으로써 소련 전체를 운영하는 공산당의 1천4백만여명의 관료가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를 통하여 소련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 새로운 계급은 공산당의 집권이 보장된 일당 체제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과 요구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으며,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지식인들은 대체로 이것이 소련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실패원인인 것으로 진단하였다(*Pravda*, 1989. 7. 14;16;17).

그들은 지금까지의 소련의 사회주의가 Marxism-Leninism에서 제시된 특수한 생산관계의 실현에 집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근본정신인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이 오히려 저해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형식적 측면 혹은 구조적 측면 보다는 사회주의의 근본정신 혹은 궁극적 목표의 실현이 더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점은 페레스트로이카 발생 배후의 대표적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T. Zaslavskaja에 의해서 가장 분명히 지적되었다. 그녀에 의하면, 지금까지 소련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중앙의 통제와 계획에 의한 국가경제의 운영,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그리고 당의 전권 등과 같은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져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진보적인 사상인 이유는 그러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기인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란 애초에 이윤의 극대화라든지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했던 사상이 아니라, 적절한 부의 창출, 편안한 생활환경의 형성,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고른 생활수준의 구현을 추구했던 사상이었다. 따라서 특수한 외형적 구조는 사실 사회주의의 본질과는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Marxism-Leninism이 제시한 사회경제체제의 특수한 구조의 실현이 소련에서는 더욱 강조되고만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Zaslavskaja에 의하면, 특정한 형태의 사회 경제체제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사회적 특성이 구현되는 체제가 바로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였다. 즉, 일군의 인간집단이 다른 일군의 인간집단을 차취하는 일이 없고, 불로소득이 최소화되고 단지 노동에 비례

한 소득이 보장되며, 빈곤이 사라지고 생활수준의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지며,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정치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정치경제적 구조가 적합한가?라는 문제는 사회주의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Zaslavskia, 1990:12-14).

그외 다른 많은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들도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그 의미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언론인인 Aleksandr Bovin은 페레스트로이카로써 소련은 이제 “권위주의, 신격화된 지도자, 관료제도의 지배,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그리고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으로 점철된 기존의 사회주의 모델을 거부한다”고 하여, 과거의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를 지적하였다(*Izvestia*, 1989. 5. 11). Aleksandr Yakovlev 역시 “사회주의는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근본정신이 부정된 채로 진전되어온 데에 소련 사회주의의 근본문제가 있다”고 하여,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과제는 프롤레타리아독재가 강조된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의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주의를 제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989:333-355).

III.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

페레스트로이카가 지향하는 대체적인 개혁의 방향이 구조의 재편성을 통한 사회주의 정신의 부활이라면,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가? 개혁의 내용을 먼저 과거체제와의 비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소련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핵심은 1956년 11월 당시 소련 공산당 최고의 이론가이던 Mikhail Suslov에 의해서 “일반법칙(general law)”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된 바 있다(*Pravda*, 1956. 11. 7). (1)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2)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당의 통제; (3)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경제의 중앙계획; 그리고 (4) 사회주의적 업적에 대한 국제적 보호(프롤레타리아 혹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Suslov가 지적한 이 네가지 요소는 그 후 소련 사회주의 모델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가 지향하는 구조개혁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 모두를 폐기함으로써 소련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1977년 헌법에서 제6조에 명문화되어 실체에 있어서 공산당외에 다른 모든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집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게 되었다.⁽²⁾ 그리하여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곧 일당독재체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라는 기간 자체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규정된 만큼, 다른 경쟁적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소련체제에 있어서 당연시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요체가 민주화임을 주장한 Gorbachev 조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혹은 공산당의 독점적인 집권)만은 1989년 말기까지도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고집하였다.

그러한 집착은 그러나 그 후 민주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990년 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공산당 권력독점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해온 민주화조치의 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소련에서 공산당은 더 이상 헌법에 의하여 권력의 독점을 보장된 신성한 조직이 아니라, 서방의 다원주의 체제에서와 같이, 다양한 이상을 표방하는 여러 정당들 중의 하나로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Gorbachev를 비롯한 페레스트로이카 지도자들의 새로운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일 합법정당으로서 공산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경쟁없이 집권을 보장 받아 왔고, 그로 인해서 야기된 자기혁신의 자극 부재가 당을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명폐에 빠뜨렸으며, 그것이 소련을 침체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법의 보호아래 당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공산당은 지도력의 유지를 위하여 선거에서 싸워 이김으로써 집권을 쟁취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당장 공산당에 대응하는

(2) 소련 헌법 제6조는 소련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공산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소련사회를 이끌고 주도하는 세력과 정치체제, 모든 국가 조직과 공공단체의 핵은 공산당이며…, Marxism-Leninism으로 무장된 소련 공산당은 소련의 전반적인 발전문제와 국내외정책을 결정하고 인민을 위한 위대하고 전설적인 작업을 지시하며,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이론적으로 구체화된 현장을 수행한다.”

새로운 정당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회인 「인민대표자회의」의 선출에 자유경쟁선거를 도입함으로써 장차 정치의 다원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그 의회내에서 보수세력은 보수세력대로 「소유즈 (연합)」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혁신세력은 혁신세력 대로 「지역 간 대표 그룹」이라는 각기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하여 뚜렷한 이념적인 대립상을 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군소정당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러시아 민주당, 민주강령운동, 러시아 사회민주당과 같은 反공산당적 정당조직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소련은 이제 법적으로나 현실상황적으로나 정치적 영역에서 다원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라는 요소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 문제에 비하여 훨씬 쉽게 일찍 폐기되었다. 이는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 보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언론과 출판물에 대한 검열의 대폭적인 완화를 지적할 수 있다. 과거의 경우 체제에 대한 비판은 물론 당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는 공공매체를 통하여 소개될 수가 없었고, 단지 사미즈다트와 같은 지하 인쇄물을 통하여서만 활자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와 더불어 소련 사회에는 수많은 종류의 경기 및 부정기 출판물이 각기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論調는 급진 개혁지향적 성향에서부터 왕정복고적 극우 러시아 민족주의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다양하다. 이는 1986년 6월 Gorbachev가 소련작가동맹에서 행한 연설에서 피력한 바가 있는 「사회주의적 다원주의」라는 원리하에, 언론매체에서 다양한 견해의 피력과 그들간의 논쟁을 허용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와 함께 많은 주요 언론지의 편집장들이 Brezhnev 시대에 임명된 사람들로부터 보다 진보적인 경향의 인물들로 교체되었다. 이 후 소련사회에서 사회통제에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검열제도는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통제의 대폭적인 완화는 시민들의 활발한 집단형성에서도 나타난다. 정부의 무책임한 산업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집단들, 보다 과격하게는 각 공화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해방전선들의 형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모두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실증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의 계획 및 통제에 의한 경제운용 역시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였으나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것 역시 실질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질적 풍요는 공산주의 실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은 Stalin이래 모든 당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었다. 그리하여 생산력의 발전은 소련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련의 경제발전은 결국 그러한 희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실패하였다. 사실상 소련 사회주의가 가장 실패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측면이었다. 오히려 생산력의 발전은 점차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그 격차가 증대되기만 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 역시 개선보다는 궁핍만 심화될 뿐이었다. 소련 당국이 제시한 수치에 근거한 연구에서도, 1965년의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7%정도이던 것이 그 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여 1985년에 이르러서는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Hewett, 1988:63). 이미 많은 서방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듯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유재산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발적 노동동기를 없앤 점, 그리고 중앙계획체제의 본질적인 비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Gorbachev를 비롯한 페레스트로이카 입안자들도 이러한 지적들을 수용하여 경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앙계획 체제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운용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그것의 점진적인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생산활동이 실제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소련사회에 만연한 생필품의 부족현상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시장경제적 유도조치로는 국영기업들에 대하여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것이라든지, 중앙의 계획과 통제 밖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사기업 형태의 협동기업을 허용한 것을 들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보다 최근에는 노동의욕의 자극과 창의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소련 최고회의는 1990년 2월 농지의 종신점유와 상속을 인정하는 토지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이어서 3월에는 생산수단과 토지, 증권 및 주식 등의 개인소유를 합법화

찬성하는 재산소유법안을 절대다수의 찬성(찬성 350, 반대 3, 기권 11)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후자는 공업 및 농업 양분야에서 사적소유를 인정함으로써 종래의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골격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더 나아가서 Shatalin의 주도하에 1990년 9월에 제시된 소위 「5백일 소련 경제개혁안」에서는 그러한 사적 재산 소유제도와 시장원리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제도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키기에 이르렀다. Shatalin의 안은 국영기업과 국유재산의 민영화 그리고 법인의 사유제 확대가 주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산을 민간에게 불허한다는 취지의 이 안은, 국영기업의 70%는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시키고, 90%의 서비스 및 소매유통 분야의 중소규모 국영기업은 개인 구매자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의 조항들을 포함시켜, 전체적인 경제 운용 자체를 완전히 사유재산 인정하의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毎日經濟新聞*, 1990. 9. 16; *Time*, 1990. 9. 17:16-17).

원래 사유재산제도는 인간사회의 계급적 불평등의 근원으로서 공산주의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가장 죄악시된 제도였다. 그러나 Yakovlev가 “우리것은 내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노동과 창의력 발휘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허용은 불가피한 것임을 70년여에 걸친 사유재산 부정의 결과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영역에 있어서 다당제의 도입에 필적하는 경제체제의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애초에 Gorbachev가 의미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중앙통제를 근간으로 한 사회주의체제를 효율적으로 「재구성(restructuring)」한다는 것이었으나, 1990년 후반기에 이르러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적 소유’와 ‘중앙통제’를 모두 기각하고 사유재산과 시장원리를 대폭적으로 도입하여, 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6년째가 되는 1990년 9월의 시점에서 볼 때, 실제로 소련 전체에서 중앙통제식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미련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현상은 Shatalin이 “인류는 시장경제체제 보다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한 데에서 가장 극명히 나타난다(*Time*, 1990. 9. 24:31).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로 인식되는 러시아 공화국의 수상, Ivan Silayev, 역시 “세계의 경험으로 볼 때, 시장관계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착취수준은 낮아진다”고 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였다. Gorbachev는 “이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여 자신의 애초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였다(*Newsweek*, 1990. 9. 24:16.).

소련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Suslov가 지적했던 「사회주의적(혹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역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실질적인 폐기의 운명을 맞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중요성을 Suslov를 비롯한 소련의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자본주의체제와의 국제적인 대결과 투쟁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단결된 힘으로써 그들이 성취한 사회주의적 업적을 공동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지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태를 계기로 「Brezhnev 독트린」을 통하여 가장 분명히 천명되었다. 각국의 사회주의 업적은 세계의 모든 노동계급의 업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수호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무라는 것이 그것의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특정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사회주의의 포기도 허용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그간 소련의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성이 부과되었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이론도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부정되었다. 이미 1986년 말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Gorbachev는 동구우방국들의 자율적인 정체노선 결정을 장려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즉, 혁명과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길을 거칠 수 있으며, 어떠한 공산당도 真實에 관한 독점적인 해석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입장은 1989년 여름부터 본격화된 동유럽의 민주화 열기에 대하여 소련이 취한 방관자적 태도에서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1989년 10월 동독인들이 대거 서독으로 탈주하면서 발생한 동독의 자유화운동으로 Honecker 정부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동독 국가수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Gorbachev는, “동독의 문제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베를린에서 결정될 뿐이다”라고 하여 동독사태에 소련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Newsweeks*, 1989. 10. 16:11). 실제로 동유럽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사회주의체제가 연이어 붕괴되는 와중에서도 소련은 그것을 방지하려는 아무런 가지적인 개입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

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의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³⁾

IV. 페레스트로이카와 평등주의 원칙의 변화

1956년 Suslov에 의하여 제시된 후 그간 소련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구조적 특성으로서 견지되어온 위의 네가지 원칙의 폐기와 더불어,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적 혁명성을 부각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Marxism이 이상화한 공산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계급이 없는 사회였다. 거기에서는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가 없고, 단지 필요에 따른 물자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십지어는 화폐까지 폐지되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물자는 직접 배분된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간에 어떠한 의미의 경제적 차이도 없어지는 평등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따라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까지 소련사회에서 한 핵심적인 원칙으로서 중시되었던 것은 평등주의의 원칙이었다. 이것은 무계급사회를 지향했던 소련 사회주의에 있어서 당연시되었던 이상이며 또한 목표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Marx의 이론에서도 완전한 공산주의 실현 이전의 사회주의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이 인정되었다. 고타綱領批評(1875)에서 Marx는 상이한 개인적 능력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주의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단계에서도 사회정의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것이다(Tucker, 1978: 530). Marx에 의하면 가장 공정한 분배의 원칙은 공산주의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하였다. 단지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즉 사회주의단계에서는, 분배의 공정한 기준은 “노동의 양과 질”(즉 생산에의 공헌)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였다. “노동의 양과 질”은 각 개인이 태고난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이 있으므로, 선천적인

(3) 소련의 북한문체 전문가인 마실리 미헤프도 朝鮮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의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동구사태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북한의 내정에[도]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하지 않은 것이 新思考이다”라고 답하였다. 「朝鮮日報」, 1990년 9월 9일, 5면.

요인으로 인하여 보상에 차이를 받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는 점은 Marx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단계에서는 자본주의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할 만큼 충분한 물질적 풍요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에 비례한 분배는 사회주의 발전에 필요한 자극(incentive)으로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Tucker, 1978: 531).

그러나 불세비키 혁명 이후 소련에서는 Marx의 이론 중 이러한 단계론적인 분배원칙은 사실상 거의 무시되었다. Stalin 집권 후 한동안 생산의 독려를 위하여 노동자들 사이에 Stakhanovite 운동도 전개하고 과학기술자동 생산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전문가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소련에서는, 대체로 사회주의의 발전은 적어도 소득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상에 따른 사회주의국가는 정책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소련의 정책 결정자들의 보편적인 신념이었다. 특히 60년대의 소련사회를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라고 규정한 Brezhnev 체제에서는 평등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 「임금평준화」(uravnivilovka; wage-leveling) 정책이 경제운용의 한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보너스의 지급 조차 노동자 개인이나 공장의 생산성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심지어는 몇몇 Brezhnev 시대의 이론가들은 완전한 공산주의단계의 성취 이전에도 평등사회의 실현은 가능하다고 하여, 「발전된 사회주의」의 한 중요지표로서 소득수준의 평준화를 통한 무계급사회 혹은 평등사회의 조기 실현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사회 전반에는 평등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신념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전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었고, 결국 근본적인 수정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오히려 평등주의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Gorbachev를 비롯한 현 소련 지도자들간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1986년의 제27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Gorbachev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평등주의적 분배원칙에 반대하여, 노동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및 기타 보상의 지급을 주장하였다(*Current Soviet Policies IX*, 1986:140, 146). 그 이후 이 문제는 Gorbachev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사회주의

는 결코 평등화가 아니란 점이 여러차례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 5월, Gorbachev는 사회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며, 오히려 노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Moscow News*, 3270: 2).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의 한사람인 A.I. Volkov 역시 과거의 「임금평준화」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즉, 지난 70년간 평등주의적 신념은 경제의 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다. 이제 소련은 평등주의적 관습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차등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시점에 와 있다. 평등은 共貧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Volkov and Mironov, 1990:177).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적인 경제이론가의 한 사람인 L. Abalkin 역시 “남들보다 열심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노동자는 더 잘 살아야 한다”고 反평등주의적 견해를 보였다(Abalkin, 1987:76). 그 외에도 많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지지자들은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남들과 똑 같은 보상을 주는 평등주의는 사회주의적 노동착취라고까지 비판하였다.

기존의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에 반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페레스트로이카적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사회학자 Tatiana Zaslavskaya이다. 1986년 *Kommunist*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녀는 원래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었으나, 지금까지의 소련 사회주의에서 는 그 어느쪽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즉, 전체 소련 노동자의 약 1/3만이 “능력에 따라”(즉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의 실질적 생산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임금제도는 생산과 노동, 그리고 물질적 보상간의 연관성을 상실하게 하여 노동의 세계에서 소외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Zaslavskaya, 1986:63, 66).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책으로서 그녀는 노동의 양과 질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별 생활비용의 차이, 그리고 부양가족의 숫자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합리적인 임금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Zaslavskaya, 1986:69). Zaslavskaya가 특히 강조한 것은 그러한 임금정책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혹은 자극제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회정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A. Tsipko와 같은 사람은 Zaslavskaya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언

급하였다. 즉, 이러한 문제가 소련 사회주의체제에서 야기된 것은 소련 공산당의 잘못된 운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Marxism-Leninism의 본질에서 연유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즉, Marxism은 애초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여, 적절한 자극과 유인책의 필요성을 무시한 결과, 자발적인 참여와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따라서 강제적인 수단에 많은 의존을 하게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의 결론은, 가장 효과적인 발전은 강제가 아닌 자발성에서 출발하며, 자발성의 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발성의 중요성에 대한 무시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Marxism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결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Tsipko, 1988, 1989).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임금격차까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뚜렷이 논의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Gorbachev가 1987년 6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분명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는 한마디로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상한선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노동자에 비해 수입이 많아도 그것이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라면 그로 인한 소득격차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노동의 실제기여를 초월한 보상(즉 불로소득) 혹은 노동의 실제기여에 못미치는 보상이지, 그것이 정당하게 벌어진 것이라면 임금의 격차 자체는 이제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한 반대의사 또한 제시되었다. I. Karpova 같은 사람은, 지나친 임금 및 소득격차가 야기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라면 임금격차 자체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식의 견해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녀는 지나친 임금격차가 야기할 사회적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과 같은 장치는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Karpova, 1986:66). 다른 몇몇 반대자들도, 임금의 격차는 그것이 아무리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사회의 계층화를 야기할 것이며 그것은 곧 계층간의 위화감을 자아내어 사회의 원만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전체적

으로 볼 때 그러한 異論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Zaslavskia등의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필요한 자극제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임금의 차등화는 그 정당성이 대체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용인으로서 받는 임금이 아닌 자영사업 활동을 통한 소득의 경우, 특히 폐레스트로이카 체제에서 인정된 협동기업(cooperative)이라는 사기업 활동에서 얻어진 소득 그리고 집단농장 농부들이 개인적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관해서는 ‘정당한 소득’의 기준과 그 한계를 규정하는 데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그 소득은 투입된 노동과 비례적인 관계없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물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장체제의 가격이란 시장에서의 희소성과 소비자의 화폐소유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과 같은 기준에서 소득의 도덕적 정당성을 따지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관하여 Zaslavskia도 그러한 자영사업 활동에 따른 소득이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소득을 2~3배 상회하는 경우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어도, 가령 9, 10배 혹은 그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다는 식의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다(Zaslavskia, 1987:5). 그녀와 마찬가지로 많은 개혁지향적 인사들도 사적기업활동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면서도, 그로 인한 지나친 소득격차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사업 활동의 결과로 야기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반감은 소련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기업은 날강도들”이라는 표어가 적힌 단추들이 유행이 될 만큼, 자본주의적 상행위와 그로 인한 부의 축적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물품들이 협동기업 상점에서는 심지어 국영상점 가격의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품귀현상 자체도 일부 협동기업 상인들의 악의적인 매점매석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은 듯 하다. 그리하여 체제개방과 함께 새로이 발생한 많은 사회문제들이 협동기업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현 소련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협동기업들의 경우, 지역에 따라 75%나 되는 보복적인 중파세가 취해지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면허 차체가 지방행정 당국에 의해 일방

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민대표자회의 대의원의 과반수 가량이 협동기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지지하였다 (*Newsweek*, 1990. 10. 9:26-29).

그러나 평등주의가 사회저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여도, 페레스트로이카 체제에서 정당한 협동기업 활동 자체는 정책적으로 계속 장려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지고 보면 소련사회에서 협동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매점매석이나 폭리행위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지, 사적인 기업 혹은 상업활동 자체는 원칙론에서 더 이상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런 악영향들만 적절히 통제된다면 협동기업은 점차 소련경제에서 정착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Gorbachev 자신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협동기업의 설립 자체는 권장하지만 매점매석이나 폭리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Newsweek*, 1990. 10. 9:28). 현재 소련경제에서 협동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정도이다. 그러나 소련의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45%의 도시민들은 협동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확대를 환영하며, 약 30%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협동기업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협동기업에 대하여 3배 가량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Newsweek*, 1990. 10. 9:29).

시장경제원리의 대폭적인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 체제에서 협동기업과 같은 사적인 경제활동이 계속 확대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러면 그로 인한 소득격차는 무한정 인정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페레스트로이카 이론가도 아직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평등주의가 뿌리깊은 소련체제의 사회문화적인 유산으로 인하여, 지나친 소득격차에 대하여서는 조세정책 등을 통한 어느정도의 시정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기업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문제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이 유보되고 있는 것 처럼, 교육, 주택, 대중교통, 의료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과거와 같이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페레스트로이카 지지자들 사이에 제기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바로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페레스트로이카의 혁명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역시 Zaslavskaiia였고 Shatalin 역시 그녀의 견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두 사람의 공통된 주장은, 국가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책들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개인적인 노력여하와 관계없이 보장하여 주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촉진시키는 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는,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에 관해서는 절약의 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물자의 낭비가 초래되고, 이것이 결국은 생필품 결핍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Zaslavskaiia는 그러한 사회보장 정책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비교적 수입이 많은 도시거주민들이고, 실제로 국가의 사회보장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시골의 저소득 계층은 지역적인 후진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러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모순도 지적하였다(Zaslavskaiia, 1987:72). Shatalin의 경우는 고용의 보장제도까지 같은 범주의 문제로 제기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Shatalin은 바로 이점이 기업의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고용까지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절감을 어렵게 하였고, 노동자 개인들의 차원에서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자신의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자극을 없앴다는 것이다. 현재의 일터가 문을 닫으면 국가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직장을 존속시키기 위해 절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Shatalin, 1986:63-65). Zaslavskaiia와 Shatalin의 견해는 고용의 보장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결국 노동생산성의 촉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상당한 수준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도 반론 또한 제기되었다. 반론의 요지는 대체로 사회보장제도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이 이룬 가장 공정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사회주의 정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A. Bim과 A. Shokhin이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현재 소련 체제에서 노동생산성의 자극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은 지나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우선 고용의 기회가 풍부한 것과 임금결정에 있어서 개인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부담의 사회보장을 철폐하고, 의료서비스, 교육, 주택 등을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득으로 부담하게 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단지 빈부격차의 심화만 확대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Bim and Shokhin, 1986:65-72).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를 국가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례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한 본질적인 사회경제정책이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요 이론가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론적인 사회주의 이론들에 대한 교조적인 집착보다는 소련의 현실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 실용성에 페레스트로이카는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V. 종합 : 새로운 모델

볼셰비키 혁명으로 집권한 소련공산당은 Marxism-Leninism에 따른 사회주의체제를 골격으로 하여 약 70년간 소련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실현이라는 이념적 공약을 통치권력의 정당성으로 삼았다. 그 70년의 역사 가운데에는 소련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실현에 아주 가까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했던 낙관적인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뚜렷이 나타난 체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계기로 소련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실현의 희망을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원인이 소련이 의존한 Marxism-Leninism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이론 자체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80년대 중반에 체제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탄생시킨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Gorbachev 조차 자신의 집권 초기에는, 소련의 문제는 Marxism-Leninism과 그것에 바탕을 둔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여,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보다는 우스코레니에(uskorenie: [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강

조하였다. 그리하여 구조적 문제점의 지적보다는 禁酒운동등을 통한 노동윤리의 강화라든지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일소 혹은 사회기강 재확립 등의 구조 외적인 측면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보다 구조적인 측면의 개혁은 1987년이 되어서야 강조되었다. 글라스노스트(glasnost)로 대표되는 정보개방과 정치적 자유의 확대, 경제운영의 제한적 분권화(decentralization), 시장원리의 부분적인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그 목표를 Stalin에 의하여 왜곡된 Lenin의 사회주의 정신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정하여, 적어도 Marxism-Leninism이 설정한 사회주의이론과 원칙들은 고수 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거기에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천하는 전위대로서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장악 그리고 당의 운영원리로서 민주집중제의 유지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련 사회주의의 근간을 형성해온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경제운영의 중앙계획과 통제도 사실은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기강의 재확립이라든지 Marxism-Leninism 법주내의 제도개혁은 소련 사회주의의 침체를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경제발전은 가속화(uskorenie)는 커녕 오히려 퇴보와 악화 일로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1989년 후반기 부터는 Stanislav Shatalin, Nikolai Petrakov, Leonid Abalkin 등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지식인들에 의하여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와같은 흐름의 한 반영으로서 Yeltsin과 같은 사람이 소련의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장(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의 전면에 새로이 부각된 지식인들 그리고 급진적 정치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개념 자체 부터 재설정하였다. 즉, 지금까지 소련에서 사회주의란 오로지 Marxism-Leninism의 일부분으로서 이해되어,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공산주의의 주요 제도적 특성들을 심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소련의 사회주의는 그 구조적 결격이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당의 통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경제운영, 그리고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등으로 특징지워졌다. 그러나 그러한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보다 우월한 체제를 창출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사회주의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는 커녕,

생활의 궁핍과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낙착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Shatalin, Abalkin 등의 폐레스트로이카의 전면에 새로이 부각된 지식인들은 이제 사회주의를 Marxism-Leninism과는 완전히 결별시켜서,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높은 생활수준과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로 개념화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Marxism-Leninism에 입각한 기존의 정치 경제제도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노동자들의 견해가 보다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체제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제도는 소련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강화시켜 온 무차별적인 평등주의도, 생산성의 향상과 사회정의의 실천을 위해서, 점차 지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정신의 결정체가 바로 Gorbachev의 지지하에 Shatalin에 의하여 작성된 소위 「500일 소련 경제개혁안」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500일 소련 경제개혁안」은, 비록 정책으로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사기업 활동과 부유재산을 인정하고 중앙의 계획과 통제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수요공급이 차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용함으로써, 사실상 소련 경제를 자본주의체제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화(demokratizatsia)라는 가치 아래 이미 시작된 다원주의적 요소들의 도입과 함께 연결되어, 소련체제를 전체적으로 보다 서구 자본주의사회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개혁지향적인 지식인들 가운데 보다 온전한 성향의 사람들은, Gorbachev 자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폐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의 기본정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복지의 향상에 있다는 것이다. Marxism-Leninism의 일부로서 소련에서 실천된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폐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것이다. 결국 폐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것은 Stalin이 왜곡한 사회주의를 청산하고 Lenin의 진정한 사회주의정신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견해가 진정으로 반영되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 즉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가치가 의미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건설은 바로 Lenin이 추구했던 사회주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소련에 뿌리를 내린 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 사회주의체제는 Lenin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점이 없지 않으며, Stalin이 완성시킨 전체주의적 정치—경제체제도 여러면에 있어서 그 근원을 Lenin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Lenin의 사상이나 그가 취한 중요한 결정 가운데에는 민주적 요소의 신장과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령, Lenin은 자신의 볼셰비키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불법화시키고 Cheka라는 비밀경찰 조직을 동원하여 그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그리고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치루어진 제헌의회 선거에서 볼셰비키당이 707석 중 175석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410석을 확보한 사회혁명당(SR)에 패배하여 소수당으로 전락하자 제헌의회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더구나 Lenin의 정신을 언급하는 온건개혁론자들이 추진하는 소련 사회주의의 체제개혁의 내용도 실제로 있어서는 Lenin이 극렬히 비판했던 사회민주주의 방향이란 점이다. 그것은 현재 서유럽의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의 체제모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주도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소련체제가 지향할 모델을 서방 국가들 중 스웨덴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체제에서 찾고 있다. 그러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의회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를 수정주의로 가장 신랄히 비판한 사회주의자는 다름아닌 Lenin이었다. 그는 오로지 계급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세력의 집권과 공산당에 의한 무자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을 진정한 사회주의의 정표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체제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기업활동을 인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강력한 누진적 과세제도 등을 실시하여 정부가 부의 분배정책에 적극으로 개입한다는 데에 있다. 그에 비해서 Lenin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인 고용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증오를 분명히 한 교조주의적 Marxist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다면, 개혁론자들인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원천으로서 Leninism을 지적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에 남아있는 사회주의 정신은 Marxism-Leninism과는 완전히 결별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련에서 더

이상 공산당은 유일 합법정당으로서 권력의 독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들 중의 하나로서 선거라는 경쟁을 통해(즉, 국민의 지지를 통해 서만) 집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은 소련 국민들의 의식화 여부에 따라서 소련이 장차 어떠한 정치체제 혹은 이데올로기를 수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현 페레스트로이카를 주도하는 소련 지도자들이 노동자의 복리를 근본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정신 자체는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적어도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의 종말은 분명히告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현

- Abalkin, L.I.
 1987 *Novyi tip ekonomicheskogo myshleniya*(새로운 유형의 경제사고). Moscow: Ekonomika.
- Bim, A. and A. Shokhin,
 1989 "Sistema raspredeleniia: Na putiakh perestoriki,"(분배체제 : 페레스트로이카의 통로), *Kommunist.* no. 15.
- Brezhnev, L.I.
 1970~82 "Otchetnyi doklad TsK KPSS XXIV s'ezdu,"(제24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요약보고), *Leninskimi kursom*(레닌의 노선). vol. 2, Moscow: Politizdat.
- Butenko, A.
 1976 "Razvitoe sotsialisticheskoe obschestvo: sushchnost'i problemy,"(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 본질과 문제점), *Voprosy filosofii.* no. 6.
- Evans, A.B.
 1988 "Developed Socialism and the New Programme of the CPSU," in Stephen White and Alex Pravda, eds., *Ideology and Soviet Politics.* London: Macmillan.
- Hewett, Ed A.
 1988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 Karpova, I.
 1986 "Mneniia i predlozheniia iz pisem-otklikov na stat'iу "Chelovecheskii faktor razvitiia ekonomiki i sotsial'naia spravedlivost","(논문 "경제발전의 인간적 요소와 사회정의"에 관한 몇 가지 견해와 제안), *Kommunist.* no. 17.
- Khrushchev, N.S.
 1957 "Report of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 to the 20th Party Congress," in Leo Grulow, ed., *Current Soviet Policies.* vol. 2, New York: Praeger.

- 1962 "The 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in Charlotte Sakowski and Leo Grulio, ed., *Current Soviet Policies*. vol. 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nin, V.I.
- 1976 *The State and Revolution*.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 Marx, K.
- 1978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in Robert C.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2nd ed., New York: Norton.
- Sharlet, R.
- 1978 *The New Soviet Constitution of 1977: Analysis and Text*. Brunswick, Ohio: King's Court Communications.
- Shatalin, S.
- 1986 "Sotsial'noe razvitiye i ekonomicheskii rost,"(사회발전과 경제성장), *Kommunist*. no. 14.
- Stalin, I.V.
- 1967 *Sochineniya*. Stand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 Tsipko, A.
- 1988 "Istoki Stalinizma," (스탈린 사상의 근원), *Nauka i zhizn*. nos. 11, 12.
- 1989 "Istoki Stalinizma," *Nauka i zhizn*. nos. 1, 2.
- Tucker, R.C. ed.
- 1978 *The Marx-Engels Reader*. New York: Norton and Company, Inc..
- Volkov, A. and V. Mironov eds.
- 1990 *The Phenomenon of Socialism: Essence, Regularities, Perspectives*. Moscow: Global Research Institute.
- Zaslavkaia, T.
- 1986 "Chelovecheskii faktor razvitiia ekonomiki i sotsial'naia spravedlivost," (경제발전의 인간적 요인과 사회정의), *Kommunist*. no. 13.
- 1987 "Zaslavskaya Talks About Her Life and Theories,"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29.
- 1990 *The Second Socialist Revolution: An Alternative Soviet Strategy*. London: I.B. Tauris.
- Current Soviet Policies IX. The Documentary Record of the 27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olumbus, Ohio: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1986.
- Financial Times*.
- Izvestia*
-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 Moscow News*.
- Newsweek*.

Pravda

TIME.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